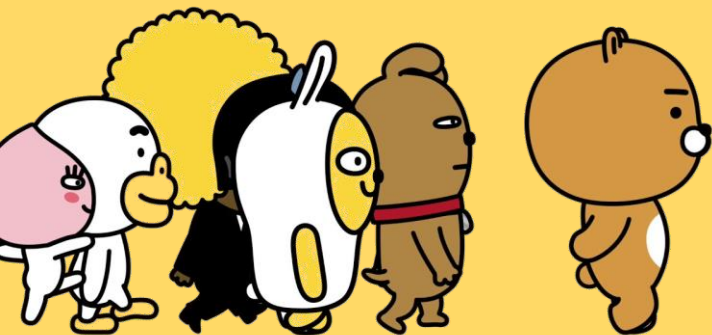


플랫폼 규제 찬반 토론

조선일보



5조 김륜구, 박민찬, 이혁주, 장건

CONTENTS

1. 논란 및 배경

- 카카오 사건 소개.
- 플랫폼 관련 규제.
- 타 신문사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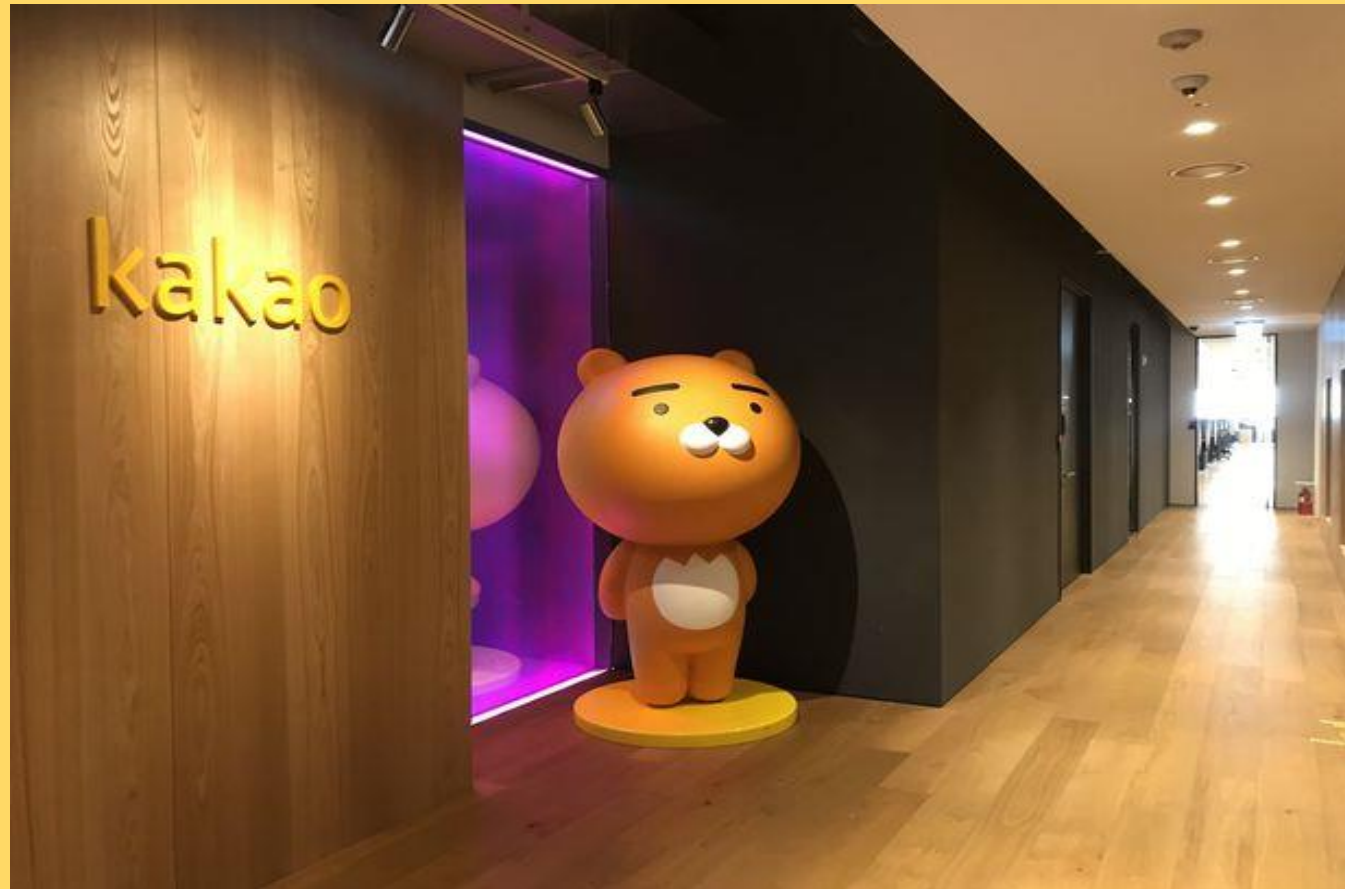
2. 입론 및 반론

- 각 입장 별 입론 및 반론.
- 난상 토론.
-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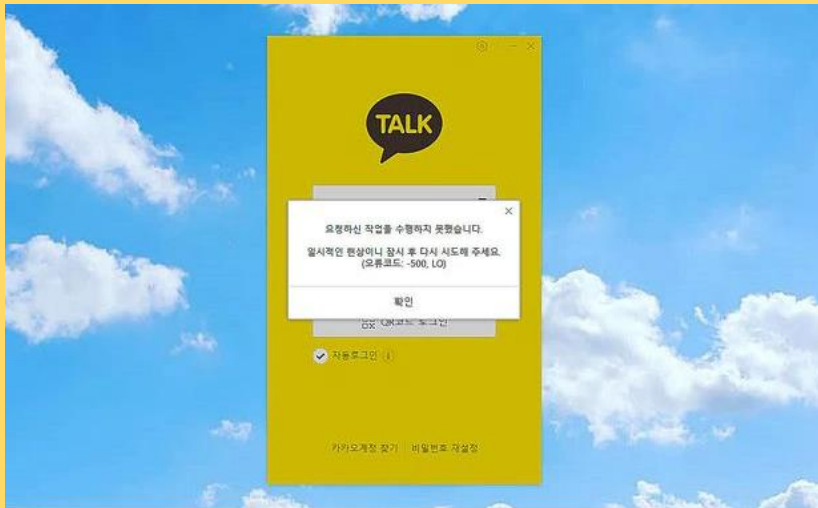
논란 및 배경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 피해는 국민이 떠 안았다

카톡 먹통에 일상 먹통... IT 플랫폼 독점, 피해는 국민이 떠안았다



이슈 소개



대한민국의 일상 멈춰 세운 '카카오 먹통' 사태'

-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 카카오톡, 택시, 송금, 결제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 중지
 - 서비스 이용자 피해 사례 속출
- ⇒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 등 IT 강국인 한국의 민낯이 드러남

이슈 소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 이번 사태로 **플랫폼 독점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남
 - 카카오 아이디로 각종 편의 서비스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가 한순간에 '초먹통 사회'로 전락
- ⇒ 카카오의 아이디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역설적으로 카카오에 문제가 생기면 전국이 마비되는
플랫폼 종속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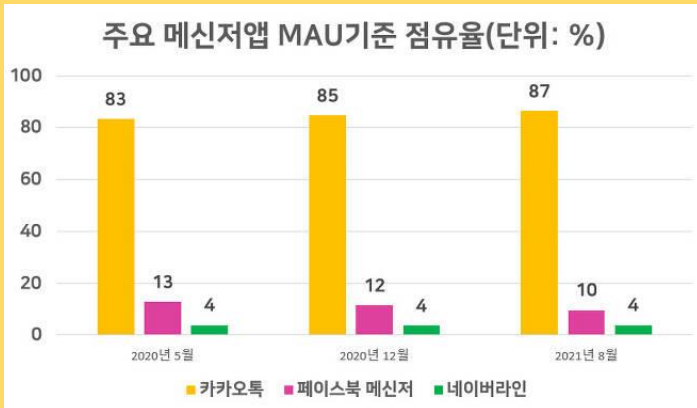
카카오 같은 문어발 막는다, 플랫폼 기업용 M&A 기준 세우기로

지금까지의 문어발식 M&A

- 기존 M&A 심사기준은 매출액이나 자산규모만 고려
- 카카오 계열사 2018년 72개에서 올 10월 128개로 늘리는 과정에서 공정위 심사 쉽게 통과
- 과정 속 위법사항 없지만, 이는 심사기준이 전통산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매출액만 고려, 플랫폼 기업의 핵심인 가입자 수, 트래픽량 고려 X)
- 현재 카카오가 플랫폼 시장의 독점자가 된 것도 이런 식으로 정부 심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M&A를 많이 한 결과물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M&A에 적용할 '플랫폼 결합 기준' 만들 예정



14년간 몸집만 불렀다... 플랫폼 규제 왜 못했나



번번히 실패한 플랫폼 규제

- 2008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관한 규제 반발에 의해 실패
- 이후 규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 있었지만 번번히 실패
-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플법 재조명

규제 피해 영향력 키워온 카카오

- 압도적 메신저 사용자수 기반으로 카카오톡의 문어발식 확장
- 택시, 결제, 은행을 비롯해 꽃 배달, 장난감 등의 골목 상권 영역까지 침투

온플법과 자율규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주요 내용

계약기간 변경·해지 시 서면 교부
거래 해지 30일 전 이유 통지
중고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불공정 행위에 공정위 과징금 허용
플랫폼 법 위반 시 배상책임 규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 플랫폼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
- 입법되지 못하고 찬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짐

자율규제

-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규제기조가 바뀌어 자율규제 방침으로 선회
-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닌 업계 자율에 맡겨 산업성장을 촉진

해외 규제 현황

세계 각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현황 괄호 안은 통과 시기

미국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추진 중)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제품 우대 금지



오픈 앱 마켓법(추진 중)
타사 앱 장터 허용, 자사 결제 시스템 강요 금지

유럽

디지털시장법(2022년 7월)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제품 우대 금지
서비스 이용 업체와 경쟁하기 위한 목적의 업체
데이터 활용 금지



터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2022년 7월)
플랫폼의 광고·마케팅 총액 제한,
자사 브랜드 제품 판매 금지



스페인

라이더법(2021년 5월)
배달 라이더 근로자로 인정,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일본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2020년 5월)
거래·계약 조건 등의 정보 제공 의무화



전세계적인 플랫폼 영향력 증가

- 갑질, 소비자의 권익 침해 등의 논란들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
- 규제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됨

각국의 규제 현황

- 미국 :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여러 법안 추진 중
- EU : 디지털시장법으로 자사 서비스에 대해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 두는 것을 금지

이외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이 도입되거나 준비 중에 있음

타 신문사 입장

몰랐었다, '플랫폼 독점'에 길들여진 우리

경향신문

- 보수적 신문사와 조선일보와 다른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문사 선정
- - "전 국민을 서비스 고객으로 삼는 거대 플랫폼의 경우에는 데이터 보관 관리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무엇보다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이 지니는 시장 독과점 문제를 다시 살피고, 이번 기회에 독점의 규제 기준까지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 현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임
-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

입론 및 반론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들의 독점 규제는 필요한
가?



찬성측 입론



플랫폼 기업의 '약탈적인 가격 책정'

-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수수료를 무료로 책정
- 이후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고 경쟁자가 사라진 시점에 악랄한 가격으로 유료화 하는 불공정 행위 진행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개인정보 남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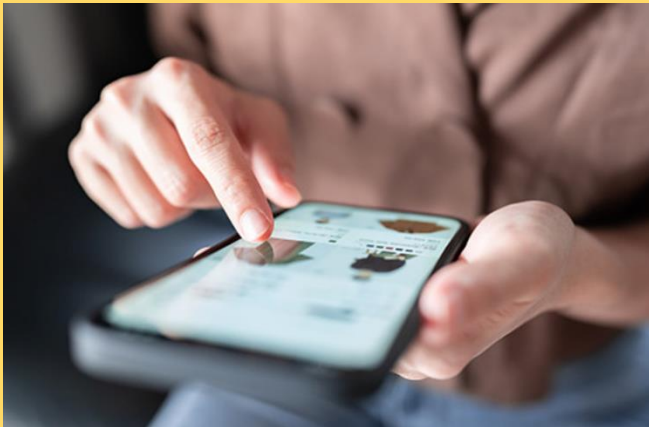
- 소비자의 선호하는 상품군, 수량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
- 이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 혹은 협력사의 제품을 상위에 노출

반대측 입론



규제시 해외 플랫폼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독점 현상 발생

- 규제로 인하여 국내 플랫폼 기업 철수 시 해외 플랫폼 기업이 국내 플랫폼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농후함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

- 정부의 극단적인 시장 개입은 오히려 부패·무능·비효율·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가 추가로 발생
-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는 선택권이 박탈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됨

찬성측 반론

규제시 해외 플랫폼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독점 현상 발생

- 국내 플랫폼 기업의 납품업체와 하청업체를 향한 갑질과 운영체제 강요 등의 플랫폼 갑질이 일어남
- 국내 플랫폼 대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국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음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

-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화재처럼 기업의 재난이 일어날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전가됨

반대측 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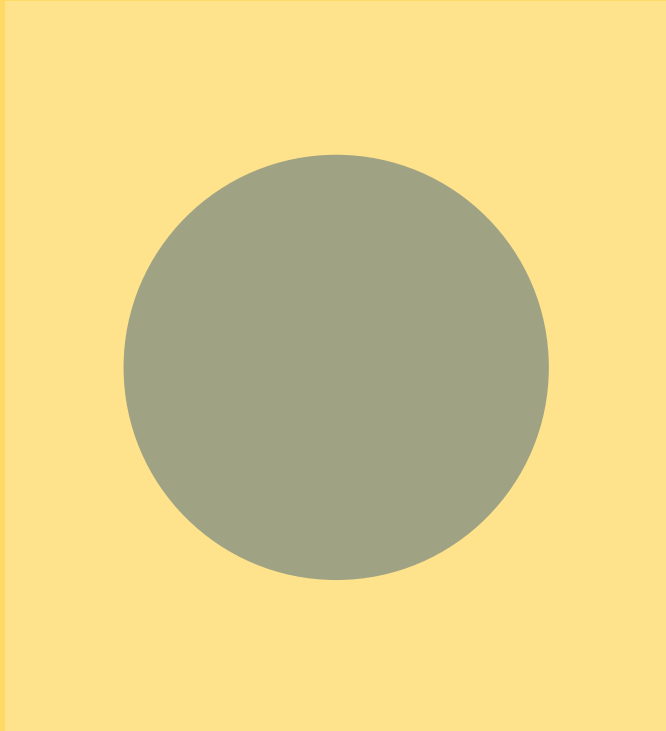
플랫폼 기업의 '약탈적인 가격 책정'

- 국내 플랫폼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전자적 위치에 있음을 고려해야함
- 미국의 경우, 플랫폼 산업 규제는 독보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에 한해 이뤄짐
- 유럽의 경우, 토종 플랫폼 경쟁력을 위해 외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 -> 규제가 자국 플랫폼의 보호 기제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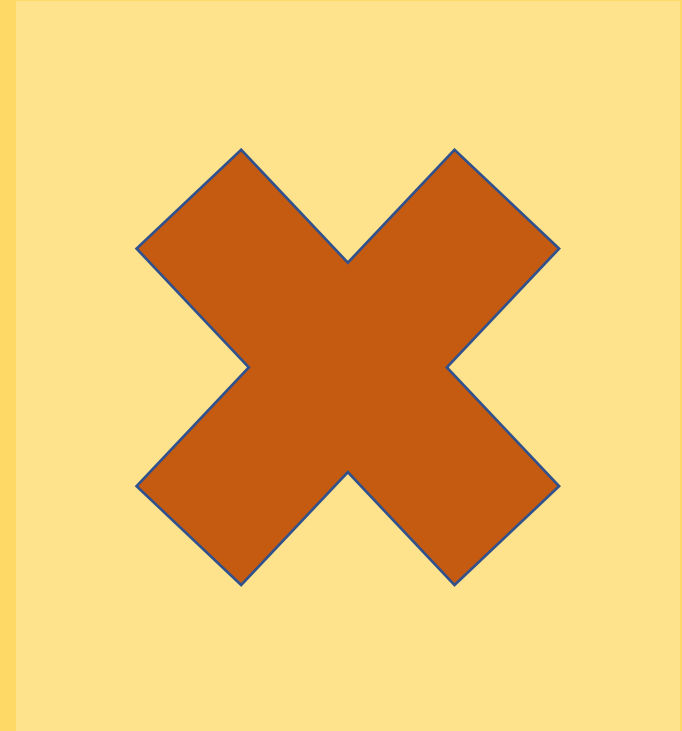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개인정보 남용 '

-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검색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

난상 토론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필요한가?



KAKAO



결론 및 제언



KAKAO

